

미흡한 조사 보완 위해 2기 진상조사위 출범 필요



5·18 진상보고서 이대론 안 된다

<3> 제도적 보완책 마련해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부실한 조사를 수록해 왜곡·편향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종합보고서 폐기의 주장이 오일단체, 오일 전문가 등 광주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 대안이 대두되고 있다.

5·18진상조사특별법상 종합보고서 발간은 법적 의무로 규정돼 있어 실제로 보고서를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종합보고서 발간 이후 부실했던 진상조사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2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안이 지역사회 뿐 아니라 각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제2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할 경우 정부 조사 기관으로서 청문회, 동행명령 발부 등 법적 권한을 보장받아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 2기 조사위원을 꾸려 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사례가 잡조된다.

사참위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꾸려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근거로 한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동안 인력·예산에 대폭 감축당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 시행일을 기준 삼아 조직을 해산하는 등 당시 정부·여당의 방해로 별다른 성과 없이

보고서 폐기·대폭 수정 불가능 과거사위 등 사례 근거 후속조사 법령 개정 통해 진실 규명하고 부끄럽지 않은 역사 만들어야

끝났다. 결국 여-야는 관련법을 개정해 2018년 사참위를 출범하고 기습기살군제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 또한 2020년 관련법 개정으로 10년간 2기 조사위원을 출범했다. 과거 2006~2010년 진행된 1기 조사위원의 조사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족회, 학계·시민사회 및 국회에서 미진청·미조사 사건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제2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려면 진화위, 사참위의 사례처럼 먼저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기존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5·18과 관련한 '계엄군 자위권 발동설', '북한군개입설' 등 왜곡이 급증한 데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5·18진상조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출범했다. 새 진상조사위원을 꾸리려면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는 물론 법 개정을 위한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2기 진상조사위 출범 시 앞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사 개시에 앞서 조사 일정과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기존 진상조사위는 활동 2년차가 되도록 자료 수집·분석을 마치지 못해 본 조사가 늦어지고, 청문회 개최 일정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열리지



청년들의 민주·인권 담론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청년학술콘서트 '민주·인권의 기억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행사에서 민주·인권의 담론 및 정신 계승 활동이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 내용으로 토론을 벌였다. (5·18기념재단 제공)

못하는 등 당초 계획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광주 지역 인사들을 조사관으로 채용해 성과 없이 활동기간 4년 여를 허송해 '진상조사위는 광주형 일자리'라는 조롱을 들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전원위원회 합의에 의한 진상조사 의결 방식도 재고 대상이다. 법원 판결을 통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굳어졌던 '권운은 일병 사망 사

건'이 국민의힘 추천 진상조사위원회의 지적에 '사인을 알 수 없음'으로 뒤바뀌는 등 위원 간 의견 충돌로 명백한 사실조차 뒤집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기존 진상조사위가 '제로 베이스'부터 재조사하는 방식을 택해 조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던만큼, 제2기에서는 기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했던 점에 대해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청문회, 동행명령 발부 등 법적

권한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우식 오일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진상조사위 활동은 단순한 진상 규명을 넘어 국가폭력 역사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가 돼야 했다"며 "기존 진상조사위 활동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후속 조사를 위해 명확한 조사계획과 방향, 조사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폭범죄 무관한 수용자 조폭사범 미지정 권고했는데...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법무부 불수용 유감"

법무부가 '조직폭력배(조폭)가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복역할 경우 조폭수용자로 지정되지 않게 지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9일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조폭단체를 탈퇴했고 조폭범죄와 무관한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입소했지만 조폭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해 교정시설이 조폭사범을 뜻하는 '노란 명찰'을 부여한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지난해 5월 피진정인인 해당 교도소장에게도 A씨를 조폭 수용자로 지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에서 조폭사범으로 명시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라 하더라도 그 형이 실효되는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구금된 사유의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조폭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광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조폭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인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법무부 장관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최종 확인하고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폭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허위서류로 보조금 빼돌린 곡성 군의원 법정에

광주지법서 재판 열려

허위서류를 꾸며 수익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곡성군 기초의원 1명이 법정에 섰다.

29일 광주지법 302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심리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 A

(여·63)의원의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는 같은 혐의로 타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B(55)씨도 서게 됐다. A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5-7월 B씨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곡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맺고 자

신인 운영한 업체를 통해 5억 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사업자 선정에 필수적인 자부담금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속여 곡성군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봤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재판은 오는 7월 12일 광주지법 같은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개소

이상동기범죄 급증 대응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와 이상동기범죄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경찰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센터)'를 운영한다.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경찰에 신고돼 정신치료가 긴급입원 조치가 26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614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 부터 5월까지 응급입원 조치 건수는 246건이었지만 올해 같은기간 26% 증가(310건)했다. 그동안 경찰은 정신질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지원팀이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청 위기개입팀에 요청해 면담 등을 거쳐 다시 응급입원을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에 센터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절차가 더 간소해진다. 센터에는 광주경찰청 응급입원 현장지원

팀(2명)과 광주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위기개입팀(2명)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정신 질환 신고출동이나 상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센터는 광주경찰청 3층에 설치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정신질환자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닌 '경찰-지자체-의료기관' 등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인 만큼 합동대응센터를 통해 한자원 높은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